□ 사회·문화 분과 권고안

## < 종합의견 >

□ 운곡천 유역 홍수피해 저감과 용수공급대책으로 봉화군에서 검토 요청한 봉화댐과 관련하여 사회·문화분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다수의견은 사회적 수용성의 경우 댐 건설에 따른 일부 갈등이 예상되나, 봉화댐은 지자체장과 의회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찬성여론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업 추진과정의 갈등요인으로는 상·하류간 이해관계의 차이와 이주보상 및 생계대책,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이 예상됨.

○ 향후 진행될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서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대상으로 댐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한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 등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자체와 반대주민 간의 충분한 대화 필요.

- 갈등예방은 찬성하는 다수의견보다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수의견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반대의견이 찬성 또는 중립의견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임.

○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사전검토협의회 단계부터 주민 대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갈등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시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문화재 영향과 관련하여 댐건설 예정지역에 보존 및 이전이 필요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현행법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40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지원 사업을 저수면적 2백만㎡, 저수용량 2천만㎥ 이상 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규모가 작은 댐도 댐 건설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의견으로 지자체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일반주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갈등영향분석과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 댐으로 인한 공동체 단절, 수몰민 및 주변지역 갈등 등 사회영향평가 필요.

## < 위원 의견 >

(위원) 김광구

○ 홍수 피해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및 경제활동 여건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높아 댐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음.

○ 댐의 건설은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에게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자 사업임.

○ 따라서 댐의 건설을 통해 댐 건설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예상되는 다양한 영향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의 의도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수용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원주, 봉화, 김천 등 다수 홍수를 통해 피해를 경험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댐건설 찬성의사를 이미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댐 건설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댐의 규모, 위치, 효과, 사후적 영향 그리고 댐 이외의 대안의 존재, 활용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우려 그리고 이해관계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지역에서의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지자체와 댐사업자 이외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댐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우려,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 이러한 절차는 이미 『공공기관의 갈등과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에 명시되어 있는 “갈등영향분석”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써 댐 건설에 관련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우려,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댐 건설사업자가 댐의 건설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댐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댐 사업의 결정에 관련하여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갈등영향분석”은 이 지역의견수렴 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예상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갈등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절차임.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6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역협의회 운영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고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들의 활용과 적용을 위해서도 “갈등영향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주민여론조사를 제안하고 있으나, 댐 사업자 및 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설명과 함께 지역주민을 포함해 댐 건설관련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관심,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균형잡인 정보제공을 통한(댐의 건설여부뿐만 아닌 다양한 측면의 장단기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이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갈등영향분석”에서 나타난 각종 이슈들에 대한 숙의를 촉발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제고하여 합의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이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 건설 타당성에 관하여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 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은 과거와는 다른 댐 건설 절차의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비용이 초래되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용성 높은 댐건설 결정을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2항에서도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갈등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일반주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듯이 “중립적인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갈등영향분석”과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위원) 김정수

○ 서구에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라는 말로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영향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개발 프로젝트는 항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있고, 개발계획에 대비를 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다.

○ 사회적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는 충격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향을 받는 사회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 자기방어력(생물적, 사회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른 것이다.

○ 현행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주체는 ‘지불하지 않는 파괴’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

- 첫째, 상품화되지 않는 생태계의 손상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생명권)
- 둘째, 공동체적인 소유나, 비소유의 생태계는 보상되지 못함
- 셋째, 조직화된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하지 못함

- 넷째, 사회적 자원(관계성, 사회구조)에 대한 보상은 없음

- 다섯째, 환경-인간 사이에 형성된 신체화된 능력에 대한 보상은 없음

○ '피해의 사회구조' 이론에 따르면 개인에게 닥친 피해는 그 개인이 처한 사회구조를 따라 확산된다는 것이며, 개인의 피해는 사회구조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피해가 존재하며, 개인보상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집합적 구조적인 피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피해이다.

○ 사회적영향평가란 '환경이 개발이나 정책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개인과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의 체계적인 사전 평가를 의미'한다. 사회적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날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와 달리 변화가 미리 일어날 수도 있고 사전에 회피할 수도 있다.

| 사회적 영향평가변수(26개) | |
|---|---|
| 인구영향 | 지역주민과 신주민과의 갈등 |
| 1.인구변화 | 14. 외부기관의 존재 |
| 2. 일시적 노동자의 유입, 유출 | 15. 새로운 사회계급의 진입 |
| 3. 계절절(유휴)주민의 존재 | 16. 지역사회의 상업적/공업적 중심의 변화 |
| 4. 개인과 가족의 이주 | 17. 주말주민(관광)의존재 |
| 5. 연령, 성, 인종과 민족구성의 변화 | 개인 및 가족수준의 영향 |
| 커뮤니티/제도적 틀 | 18. 일상생활과 이동패턴의 파괴 |
| 6.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태도 | 19. 종교활동의 불일치 |
| 7. 이해집단의 활동 | 20. 가족구성의 변화 |
| 8. 지방정부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 | 21.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
| 9. 계획, 구획활동의 존재 | 22. 공중위생과 안전의 인식 |
| 10. 산업구성의 다원화 | 23. 레저기회의 변화 |
| 11. 경제적 불공평성의 확대 | 커뮤니티 하부구조의 욕구 |
| 12. 소수민족의 고용공정성의 변화 | 24. 커뮤니티 하부구조의 변화 |
| 13. 직업적 기회구조의 변화 | 25. 토지획득과 처분 |
| | 26. 문화적, 역사적, 성스럽고 고고학적인 자원에 대한 영향. |

[그림 1] 사회영향평가 변수

□ 봉화댐

1. 봉화군이 제시한 봉화댐 사회적 영향

봉화댐 건설로 수몰되는 면적은 약 0.3㎢이며, 수몰세대는 약 10세대로 제시되었음. 또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는 지역주민의 이동로 약 2km가 단절이 되어 지역간 이동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댐 주변의 지형은 산지부로 도로건설에 따른 입지적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고 도로기능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농경지는 20ha, 농업인구는 약 3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댐 건설로 인한 수몰영향으로 이주세대 발생 및 농경지 감소 등의 영향이 있으나 영향 수준은 미미하여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주단지 및 이설도로 건설 등으로 관내 재정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활환경변화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하였음.

2. 봉화군이 제시한 봉화댐 사회적 영향의 문제점

첫째, 봉화댐 건설의 타당성이 동의가 되지 않고 있음. 수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45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이 있음. 그런데 마치 그 수해를 입고 난 후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둘째,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였다는 점임. 봉화군은 실제 댐이 만들어질 경우 수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폭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셋째, 공동체 파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참새골 지역이 수몰지역과 비수몰지역으로 구분되어 공동체가 이분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비수몰지역은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함.

넷째,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특성상 댐 건설에 따른 국지기상의 변화는 매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반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다섯째, 생활환경의 변화가 과소평가 되었음. 주택과 농경지의 수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동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갈 곳이 없다는 점이 있음. 농촌지역의 공동체는 매우 오랫동안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있음. 그러나 봉화군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매우 간과되어 있음.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경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3. 봉화댐의 실제 사회적 영향

첫째, 댐건설 타당성을 둘러 싼 갈등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됨. 2008년 홍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485억원을 투입하여 춘양면 일대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완공을 하였음. 공사를 하고 나서 5년도 안돼 다시 2008년 홍수를 이유로 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2008년 홍수가 발생된 것은 하천폭이 좁고 다리가 낮아서 나무가 걸리면서 댐현상이 발생되어 수해가 발생된 것이며 이후에 하천폭도 넓히고 교량에 교각도 세우지 않는 기법으로 놓았으며, 길도 4미터 정도 높였기 때문에 수해 우려가 없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음. 특히, 참새골은 생태계가 양호하고, 역사적의미도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암환자 등 치유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음.

둘째, 밀실행정에 대한 주민 반대 문제가 있음. 누구를 위하여 댐을 건설하는 것인지 주민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댐이 건설될 경우 피해지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몰 범위에 대하여 들어 본 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셋째, 주민의견에 대한 왜곡된 전달 문제가 있음.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들이 처음 봉화댐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걸려 있던 찬성 현수막은 주민들이 건 것이 아니라 봉화군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하였다가 떼었다고 문제를 지적하였음.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장을 떠났으나 실제 사전검토협의회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은 수몰예정지역 또는 그 상류지역에서 찬성하는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그 당시 댐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고, 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민들이 봉화댐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38명이 서명을 하였음.

넷째, 댐 건설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으로 국지기상 변화에 따른 서리피해, 동해피해,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음. 안동댐이나 임하댐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영주댐이 들어서면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봉화댐까지 만들어진다면 일조량이 줄어들고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매우 많이 제기되었음. 현재 위치 이전에 다른 지역에 댐 건설 예정지를 선정하였다가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업에 대한 피해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하여 취소되었다고 하였음.

다섯째, 수몰지역 주민은 전부 반대입장이며 댐건설 상류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댐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며, 연령별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댐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며 일부 젊은 사람들이 댐 건설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일부는 유실수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이 됨.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 터전을 잡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시내로 간다고 해도 노후를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4. 봉화댐에 대한 대안

봉화댐의 추진 필요성이 춘양면이 잠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춘양면소재지에 대한 성토가 다 되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 즉, 2008년 수해를 이유로 봉화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485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수해예방 사업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봉화댐 건설은 그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됨. 봉화댐의 대안은 댐 계획을 취소하는 것임. 그리고 보완적으로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봉화댐의 필요성은 봉화군 안전건설과에서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댐 건설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홍수예방을 위해 봉화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사회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임. 특히 댐 건설의 필요성이 밀실에서 결정이 되어 주민들의 최소한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은 댐 건설의 필요성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음. 기술분과에서 485억을 들여 홍수예방대책을 실시한 이후 실제 홍수대응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나 검토가 되지 못함.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이전 수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음. 서벽같은 경우에도 마을 복개구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하천폭을 확장하여 개선이 되었고, 이번 댐 건설의 이유로 제기되었던 춘양면의 소재지도 저지대 복토가 되어 있었다. 이전에도 저지대 배수불량으로 수해가 발생된 것이었다. 이번에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것은 수해에 대한 대비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다시 이전 수해를 이유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봉화댐 건설의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위원) 김원석, 신창현, 박문산, 박창욱, 최병호, 배만규, 조성계

○ 봉화댐은 2008년 홍수피해 발생 후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 정부에 요청해 왔던 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전원 찬성('13.7)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 의지 보이고 있음.

-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발생 가능성은 적어 지역의 수용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일부 지역민이 안개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반대 보다는 피해 최소화 및 피해 발생 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댐 시행자는 피해발생 시 보상방안 등 검토 필요.

(위원) 김원석

○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요청 수용하여 댐건설장기계획('12)에 반영,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음.

(위원) 신창현, 김정수

○ 댐으로 인해 하류는 홍수피해가 경감, 용수공급 등 수혜를 받으나, 수몰지역 및 상류지역은 고향 상실, 안개 등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

- 댐 건설시 약 10가구 정도 이주가 불가피하므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제시.

- 댐 상하류 균형 발전을 위해, 댐계획 수립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같이 검토하여 제시.

(위원) 신창현, 김광구, 이정수

○ 지역민과 지역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므로, 지역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함.

- 지역협의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및 폭 넓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여 충분한 지역민의 의견 반영.

- 댐 건설에 따른 다각적 효과, 사회적 이슈 등 확인 가능토록 주민 설명회 개최.

- 지역에 환경단체 등 미형성시 유역단위의 활동단체가 지역협의회에서 의견개진 공간 확보도 고려.

(위원) 김정수

○ 봉화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봉화댐 건설의 타당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함. 따라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이 예상됨. 따라서 봉화댐에 대한 사회영향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있음. 수몰예정지역 주민에게조차 설득력이 없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밀실행정과 주민의견 왜곡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절차적 개선이 요구되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참 고** **사회·문화 분과 참여위원**

| 중앙위원 | | 지역위원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신창현** | 환경분쟁연구소 | 배만규 |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
| 김광구 | 경희대 행정학과 | 박문산 | 경북일보 |
| 정윤한 | 안전행정부 재난협력과 | 박창욱 | 한국농업경영인봉화군연합회 |
| (김정수) | 환경안전건강연구소 | 장봉국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봉화군지회 |
| | | 조성계 |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
| | | (김원석) | 봉화군 |

* ( )는 복수분과 참여 위원